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설명자료</h1>	2016. 2. 19.	
		작성 · 문의	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노혜원 / 사무관 김신영 (Tel. 044-200-2415)
			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과장 장금용 / 사무관 장유진 (Tel. 02-2100-3732)
 행정자치부			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과장 방극봉 / 서기관 손종근 (Tel. 044-200-6755)
 법제처			
<p>즉시 사용 / 행자부, 법제처 공동배포</p>			

## ‘상위法 무시 지방조례’ 6000개 넘는다 (한국경제 ‘16.2.19.) 보도 관련

### □ 주요 보도내용

-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, 규칙 등 자치 법규 중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6000건 이상 존재

### □ 보도 설명

-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6,440건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있음
  - 이에 따라 2015년 연말 기준으로 5,208건(80.9%)을 정비하였으며, 현재 1,232건(19.1%)이 남아있는 상황임